

●● 기초생활보장제도 권리찾기 수첩

“복지제도, 이것만은 알아두자”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울타리회, 홈리스행동)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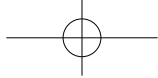
빈곤사회연대



차례 | contents

◆ 머리말	3
04 •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스스로 알고 행동하자	
◆ 제도의 이해	7
08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 알기	
13 • 의료급여제도 바로 알기	
18 • 긴급복지지원제도 바로알기	
24 • 장애인복지 제도 바로알기	
30 • 한부모지원사업 및 아동복지제도 바로알기	
35 • 기초노령연금제도 바로알기	
◆ 나의 기초생활보장 권리 찾기 길잡이	41
42 • 나의 기초생활보장 권리 찾기 길잡이	
46 • 기초생활보장 권리 바로세우기, 이렇게 함께해요!	
◆ 기초생활보장 관련 문의	48
48 • 기초생활보장 관련 문의	

발행일 2009년 7월 1일 | 발행처 민주노동당 광정숙 의원실, 빈곤사회연대 | 전화 02-784-0516(광정숙 의원) 02-778-4017(빈곤사회연대) | 팩스 02-788-3228(광정숙 의원), 02-701-7112(빈곤사회연대) | 홈페이지 <http://www.runjs.org>(광정숙 의원), <http://antipoor.jinbo.net>(빈곤사회연대) | E-mail antipoor@jinbo.net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스스로 알고 행동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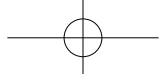
인간답게살권리를 위해 스스로 알고 행동하자!

인간답게 살 권리, 기초생활보장, 스스로 알고 행동하자!

경제위기가 불어닥칠 때마다, 경기회복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난한 이들은 늘어납니다. 2007년 말부터 불어닥친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해 한국사회도 예외없이 경제위기의 찬바람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하던 가게운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5명 중 한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얹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난을 막아내거나,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으로 희망근로니 생활공감정책이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시방편적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속빈 강정’이란 말이 딱 어울립니다. 부자들을 위해서는 10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깎아주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예산은 쥐꼬리만큼도 늘리길 아까워하는 게 지금의 정부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이러저러한 까다로운 기준을 내세워 급여를 깎는 일이 비일비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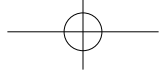
4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며, 심지어는 수급자들이 받아야 할 급여를 횡령하는 비리가 벌어졌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누구나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고, 비록 부족하나마 법과 제도로도 당연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많은 이들은 노인, 장애인, 아동,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봅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도 아직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누리겠다’라는 의식보다는 ‘주면 받고, 고마울 뿐이지’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수동적인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당당하고 능동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모두가 서야 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 복지행정의 비리나 부조리가 없어지고 보다 많은 이들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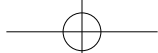
이 작은 책자에서 서술하고 있는 복지제도와 관련한 소개와 설명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미 존재하는 제도와 법에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내용을 알자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관련 당사자들이 스스로 ‘권리’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부당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권리자격을 박탈하거나, 권리 수준을 후퇴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 권



리를 박탈당하고, 권리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에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와 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스스로의 움직임과 행동을 통해 권리를 쟁취하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권리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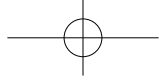
6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제도의 이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알기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바로알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양산된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정책입니다. 과거 생활보호제도가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최소한의 생활 보호 수준이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며, 국가가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빈곤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빈곤가구(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개인)에게 기초생활을 위한 생계비와 기타현물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나요?

연령, 나이,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가구(개인)소득 및 재산의 환

8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자녀, 부모)가 저소득 가구(개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월4.17%, 금융재산 월6.26%, 승용차 월100%

[2009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기준은 일반수급자가구와 근로무능력자가구로 구분되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기본재산액은 예를 들어 대도시에 일반수급자가구(개인)가 5,400만원의 자기 집이나, 전세에 살 경우,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본 재산액(공재대상 재산가액)]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일반수급자가구(만원)	5,400	3,400	2,900
근로무능력자가구(만원)	8,500	6,500	6,000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9



♥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양의무자는 수급 신청자의 자녀 또는 부모에 해당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 없음, 미약, 있음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 있음의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한 가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되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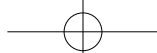
얼마나 받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소득이 없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만족할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보충급여의 원칙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큼만 생계급여로 제공합니다.

[2009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 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A)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타 지원액(B)	84,964	141,156	181,138	221,121	261,103	301,085
현금급여기준 (C=A-B)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주거급여액(D)	84,654	144,140	186,467	228,794	271,120	313,447
생계급여액 (E=C-D)	321,227	550,467	713,581	876,694	1,039,808	1,202,922

10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 급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해당자에 한해 지급되는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모든 수급자에게 2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나, 질환이 있는 경우 질환자에 한해서만 의료급여 1종이 제공됩니다. 교육급여는 수급자가구에 초,중,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제공되며, 자활급여는 조 건부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급여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거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민간 사회복지사 등)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하시면 수급담당 공무원 을 만나 상담하시고,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갖춰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별 제출서류]

제 출 목 적	제 출 서 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 확인	-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출확인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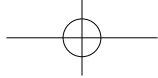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입학금, 수업료 납입고지서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 무료임대확인서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장애인등록증사본 등
생계급여조건부와 결정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 사본 등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급여 신청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징구

권리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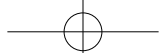
12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제도의 이해 ②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13



의료급여제도

바로알기

의료급여제이란 무엇인가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진찰·검사·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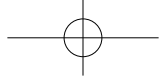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

14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하의 가구의 가구원 중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행려환자 중 거소가 불문명하고,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하였으며,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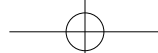
♥ 그 외 : 이재민, 의사장 및 의사자의 유족,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그가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유족

의료급여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간호, 이송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모든 서비스에 대해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정됩니다. 다만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이용하거나, 선택병의원 이외의 기관을 방문시에는 선택병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의료수급권자는 1종, 2종으로 구분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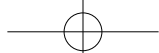
1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타법에 의한 지원자, 행려환자가 해당됩니다. 2종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이 해당됩니다. 1종, 2종에 따라 병원방문시 본인이 지불하는 비용인 본인부담금이 다릅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기관 등을 이용한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요약)]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CT, MRI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500원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500원	15%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이전에는 1종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었는데, 2006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위의 표처럼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건강생활유지비가 1인당 한달에 6,000원씩 책정되어 병원이용시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종전에 2종 수급권자였던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중 차상위 수급권자는 각각 2008년 4월과 2009년 4월에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16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의료급여는 가족 단위만 해당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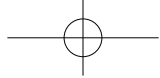
의료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세대(가구)를 단위로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보장가구 단위로 의료급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권자, 국내에 입양된 18세미만 아동,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거소가 불분명하고, 응급진료를 받았으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연고자이거나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받을 수 없는 행려환자는 개인단위로도 의료급여가 가능합니다. **권리찾기**



제도의 이해 ③

긴급복지지원제도 바로알기

18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긴급복지지원제도

바로알기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무엇인가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자기 생계곤란에 처하거나, 부상·질병을 당한 경우, 또는 화재나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등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선지원.후심사’의 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만으로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적으로 1개월에 한해(예외적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지원) 생계, 의료,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래와 같은 위기사유 및 생계곤란이 발생하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기사유

- 가구내의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화재 등이라 함은 화재, 산사태, 풍수해 등)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생계유지 등의 곤란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어떤 종류의 지원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지원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분들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기본 1개월, 필요에 따라 6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미만인 때] (원/ 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원)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45,423원씩 추가 지급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이상인 때] (원/ 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원)	245,423	417,882	504,593	663,305	786,016	908,727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22,711원씩 추가 지급

♥ 의료지원

중한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들이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회 지원이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1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를 자비로 먼저 부담한 후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먼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 주거지원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1개월 지원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구별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소자 수	1,2인 가구	3,4인 가구	5,6인 가구
지원금액(대도시)	296,000원	493,000원	650,000원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대도시 78,500원, 중소도시 51,500원, 농어촌 29,500원씩 추가 지급주
거기준 지원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분들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동절기(10~3월) 연료비 지원, 해산비,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장제비,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기요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아래와 같고, 최소1개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68,000원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22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지원방법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

위기 상황이 발생할 시,군.구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시면 전담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사후심사의 기준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 후에 사후적으로 지원이 적절했는가를 판단하는 적절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비용을 추후에 환수하기도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일 것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원	543,810	911,120	1,221,810	1,521,550	1,759,220	2,005,100

재산기준 :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일 것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 (만원)	13,500	8,500	7,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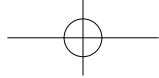
권리찾기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23



제도의 이해 ④

장애인 복지제도 바로알기



장애인복지제도

바로알기

장애인복지제도 시행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펴낸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책자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정말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장애인이 취업을 해서 소득을 갖는다는 것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 사회서비스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인 구조는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복지제도를 통해 권리를 찾아나가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 복지 확대를 요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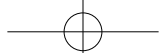


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 무엇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사업 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장애 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 상 등록 장애인(보장시설 장애인은 연 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 ~ 6급인자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중증:1인당 월 70천원 기초 경증:1인당 월 20천원
장애 아동 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 만 재가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상동) - 경증장애인 (상동)	-기초중증: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0천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 의 1 ~ 3급 장애인인 중·고등학생 및 1 ~ 3급 장애인의 중·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638,099원이하 - 2인:1,086,492원이하 - 3인:1,405,542원이하 - 4인:1,724,592원이하 - 5인:2,043,640원이하 - 6인:2,362,690원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19,050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 9천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만 3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 5천원 (1학기 2만 2천원, 2학기 2만 3천원으로 연2회)

26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그 밖의 보건복지부 시행 장애인 복지제도입니다.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8세 이상 장애인 중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사람이 2,000만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장애인이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이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 중 교부품목자가 필요물품을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해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분 건강보험료 면제 및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산출보험료 경감 등이 보장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27



♥ 장애인 생산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장애인이 취업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 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 알선 등 취업에 관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의료급여) 실시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1종은 전액, 2종은 85%를 기금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구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 장애인이 결연을 통해 후원금,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28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1~3급 장애인에게 월 250 리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 주택 거주자에 대해 가구당 3,800천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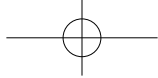
1인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 장애인이 실비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시 입소비용 중 월 27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거나 민간기관 자체 운영에 의해 이루어지는 장애인 복지제도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승용차 LPG연료 허용 /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상속세 인적 공제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증여세 면제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장애인 의무고용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공원, 공연장, 체육시설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전화요금 할인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료 법률구조제도 / 항공요금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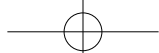
관리찾기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29



제도의 이해 ⑤

한부모 지원사업 및 아동복지제도 바로알기



한부모 지원사업 및 아동복지제도 바로알기

저소득 한부모지원 사업 알아보기

♥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로 이루어진 가정.

- 배우자의 사별 또는 이혼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자는 제외)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 가출한 자.
-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자.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저소득 조손가족)



♥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최저생계비의 130%

[2009년 최저생계비의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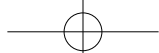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원)	638,099	1,086,492	1,405,542	1,724,592	2,043,640	2,362,690

※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 시 소득인정액 265,480씩 증가

♥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요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고등학생자녀 학비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고등학생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동사무소에 신청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8세미만의 아동	1인당 월 5만원	동사무소에 신청
자녀학용품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초등학생: 6,250원/분기 -중고생: 10,500원/분기	동사무소에 신청
자녀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	연240일: 1,440원/1일	동사무소에 신청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2008보육사업 안내 참조	보육시설에 신청
유치원 교육비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	2008보육사업 안내 참조	유치원에 신청
영구임대주택 입주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정 저소득 모 부자 가정	자치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중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량을 우선 공급	동사무소에 신청
모자일시 보호시설운영	배우자의 학대로 아동의 양육을 희망하는 모자가정	6월 이내 보호 (3개월 연장) 생계비 등 지원	동사무소에 신청
미혼모시설 운영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요보호 여성	-6월 이내 보호 (6월 연장 가능) - 생계비 등 지원	동사무소에 신청

32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아동복지제도 알아보기

♥ 소년소녀가정제도

*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중 18세미만의 아동
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의료급여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교육급여.
- 부가급여: 70만원 (1인/월)
- 정서적 후원: 후견인 지정 등을 통한 정서적 지원.
- 전세자금지원

♥ 가정위탁

*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 18세 미만의 아동
(18세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
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
(우선적으로 선정)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월 70천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지원

: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 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1인당 년 10만원이내

○ 대리양육·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

♥ 이 외에 다른 지원제도는 없습니까?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2촌 이내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함께 생활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해주는 제도.

두자녀이상 보육료제도: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이용할 경우 지원해주는 제도.

장애아 무료보육료제도: 만 0세 ~ 12세의 취학전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

기타 지원제도: 방과후 보육료 제도, 시간연장 보육료,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 등

34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제도의 이해 ⑥

기초노령 연금제도 바로알기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35



기초노령연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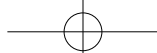
바로알기

기초노령연금이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국가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는 경제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노동력을 충분히 활용해왔으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만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의 대부분은 가족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오셨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들께서는 노후의 삶을 스스로 대비해 오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자손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당연한 일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뒤늦게나마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께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생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받나요?

36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2009년도 정부는 어르신들 중 약 70%에 해당하는 356만 명에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연령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이신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게 지급했고, 작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기준(소득과 재산 평가기준)

소득·재산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68만 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108만 8천원 이하입니다.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 소득, 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재산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골프장회원권, 부동산취득권 등



얼마나 받게 되나요?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에는 단독수급자 매월 최고 88,000원, 부부수급자 매월 최고 140,800원(노인단독연금액에서 20% 감하여 지급)입니다. 다만, 수급권자인 어르신들께서는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금액은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이(국민연금 소득) 오르면 그만큼 연금액도 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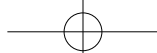
[노인단독 가정]

소득인정액	60만원 미만	60만원이상-62만원미만	62만원이상-64만원미만	64만원이상-66만원미만	66만원이상-68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초과	6만원초과-8만원이하	4만원초과-6만원이하	2만원초과-4만원이하	0원-2만원이하
연금액 (09년 4월-2010년 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노인부부 가구 중 1인 수급]

소득인정액	1008만원 미만	1008만원이상-1028만원미만	1028만원이상-1048만원미만	1048만원이상-1068만원미만	1068만원이상-1088만원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초과	6만원초과-8만원이하	4만원초과-6만원이하	2만원초과-4만원이하	0원-2만원이하
연금액 (09년 4월-2010년 3월)	88,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38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노인부부 가구 중 2인 수급]

소득인정액	96.8만원 미만	96.8만원이 -100.8만원미만	100.8만원이상- 104.8만원미만	104.8만원이상 -106.8만원미만
선정기준액차액	12만원초과	8만원초과- 12만원이하	4만원초과- 6만원이하	0원- 4만원이하
연금액 (09년 4월 -2010년 3월)	140,800원	120,000원	80,000원	4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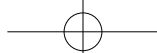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시려면 직접 신분증과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하시기 어려울 경우: 자녀, 형제자매, 친척, 사회복지 시설의 장 등이 대리인으로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65세 미만, 사실혼관계 포함)의 경우 위임장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인터넷 내려받기)
- 연금 지급받을 분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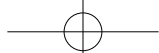
- 본인 및 배우자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음, 인터넷 내려받기)
- 신청자 신분증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전산으로 소득·재산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소득·재산
과 다른 경우 실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 : 위임장(기초노령연금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해당서식 홈페이지 안내: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http://bop.mohw.go.kr>
에서 자료마당에서 서식자료를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하기**



나의 기초생활보장 권리 찾기 길잡이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41



나의

기초생활권리찾기 길잡이

제도 이용과정에서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을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에 권리구제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한 제도들은 행정적인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을 찾아보면 청문(聽聞), 심사청구(審査請求) 및 재심사청구, 이의신청(異議申請)에 해당하는 절차가 그것입니다. 이런 절차는 권리에 대한 확인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기할 수 있는 구제절차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심사청구를 규정하고 있고요. 이 제도들은 일종의 행정심판입니다. 즉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절차로서 이것은 국민의 권리확인을 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42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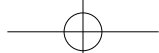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 또는 급여변경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8조). 노인복지법에서는 각종 복지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법 제50조),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복지급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법 제28조),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서도 각종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법 75조)를 통해 절차를 밟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하급기관(시군구)과 상급기관(중앙)에 대한 2차에 걸친 이의신청제도를 두고 있고요(법 제38조와 40조), 노인복지법(제50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8조), 장애인복지법(제75조)에서는 1차에 한해 심사청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반드시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성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당성까지 포괄해 폭넓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복지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시도할 수 있는 겁니다.

♥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두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을 경유해서 시장,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제38조) 그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제40조). 방법은 먼저, 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말)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공무원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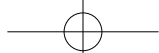
♥ 이의신청하고 결정하는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는 결정을 통지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이나 구두로 신청합니다.

먼저,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일 이내 이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작성해서 시장, 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그렇게 되면 30일 이내에 시장과 도지사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사실복명서를 관계공무원이 작성합니다. 그리고 처분에 대한 답변을 하급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장과 이의신청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 다시 당사자가 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고요. 이 때는 시·도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신청 받은 시장이나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과정을 거쳐 재결내용을 신청인과 시장, 도지사에게 각각 서면통지합니다.

44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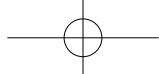


♥ 급여의 결정(확정)이나 변경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못 받으셨다
구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급여신청을 한 경우 그 결정내용과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를 언제 시행할 것인지 등이 명시된 통
보서를 보내고요, 이와 함께 ‘이의신청서’도 동봉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물론 이때 이의신청서에 작성에 대한 안내도 있어야합니다
(제 26조). 따라서 통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
자의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면 안 된다고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제 34조).

♥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으려면 어디로 전화하면 되
나요?

129번(보건복지콜센터)으로 전화하세요. 혹은 책 맨 뒤 문의 전
화를 참고하세요. **권리찾기**



기초생활권리 바로세우기

이렇게함께해요!

부당한 의료급여 지침에 대한 시정사례

의료급여 강제전환과 부당한 지침변경, 피해는 수급권자에게!

2009년 3월 말, 서울시 용산구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168세대는 아무런 통보/절차조차 받지 못한 채 의료급여 1종에서 2종으로 강 등되었습니다. 용산구청은 수급자에게 불리한 지침변경 사항을 통 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입니다. 대구에 서는 병이 위중한 의료급여 환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러 가는 과정 에서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사들은 진단서 상에 ‘근로능력 없음’을 기재하는 것은 의료법 위 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 다. 2009년 복지부에서 의료급여 관련 지침을 일선 행정기관에 전 달한 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침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2009년 의료급여 지침에서 의료급여 수급자격의 기 준을 정할 때 의사가 진단서 상 ‘근로능력 없음’을 기재할 경우에 만 근로무능력자임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의료

46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및 생활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복지전담공무원들이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1종에서 2종으로 걸러내려는 조치입니다. 결국 의료급여 1종 수급이 필요한 빈곤층이 대거 탈락되어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의료비가 너무 높아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은 권리찾기 행동이 모여 부당한 제도를 바꿔냅니다

수급권자와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판단과 적용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진단서상 ‘근로능력없음’을 표기하도록 강요하는 복지부 지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졸속행정을 펼친 용산구청에 항의하는 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수급권자들이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 행동’이라는 모임을 구성하였고 피해 당사자가 권리구제절차인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구청과 복지부를 직접 만나 항의하였습니다. 결국, 복지부는 2009년 지침변경사항의 불합리성을 시인하고 이를 시정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 수급은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 주변 이웃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해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나의 권리 찾기 행동이 부당한 제도를 올바르게 바꾸고 나를 비롯한 ‘우리’의 권리를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권리찾기**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 47



기초생활보장 관련 문의

국가기관

운영기관 및 단체	활용방안	홈페이지 / 문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정책 전반	http://www.e-welfare.go.kr http://www.129.go.kr 129(보건복지 콜센터)
	저소득층 복지정책	http://team.mohw.go.kr/blss
	기초생활보장과	02-2023-8135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8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86
	장애인정책국	02-2023-8181
노동부	구인·구직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	http://www.molab.go.kr 노동종합상담센터 tel. 1350

상담문의

운영기관 및 단체	활용방안	홈페이지 / 문의
한국빈곤문제 연구소	복지정책 전반	http://poverty21.com.ne.kr/ 080-333-9413 1588-9412
민주노동당 민생상담 119 민생희망본부	파산, 임대차보호법 및 주거복지 상담	http://www.kdip.org/ consultation 1577-0615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파산, 임대차보호법 및 주거복지 상담	http://www.minsaeng.org/ 02-867-8020, 8022
금융채무사회연석회의 금융피해자모임 '해오름'	파산 상담 /자조모임 (대구대전부산서울)	http://cafe.daum.net/socialadebt 02-778-4017
전국장애인차별 철폐연대		http://www.sadd.or.kr/ 02-738-7709
빈곤사회연대		http://antipoor.jinbo.net 02-778-4017

48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 수첩